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1년도 제3호

## 체육시민연대 성명서

“최철원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당선자는 자진 사퇴하라.”

## 스포츠폭력 추방 대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현재까지의 대책은 ‘꼬리 자르기’ 비판 피할 수 없어”

“대한체육회의 ‘폭력 팀 전국체전 출전정지’는 피해자 입 틀어 막는 대책”

“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 여론 식은 뒤 보복...다음 번엔 누가 나설 수 있나”

## 문화체육관광부

## 2021 업무계획 발표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 변함없이 추진할 것”

“스포츠기본법, 체육계 표준계약서 확산, 인권보호 등 제도 개선”

“코로나 피해 직종 금융지원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 등”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 [ 성명서 ]

# 최철원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당선자는 자진 사퇴하라.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이었던 2020년, 그해 12월 치러진 제24대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선거가 아직도 논란거리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최철원 당선자는 과거 ‘맷값 폭행’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전력이 있어 회원종목단체장 중 유일하게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차일피일 인준을 미루며 고심 중이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의 결정을 팔짱끼고 바라보고만 있다.

대한체육회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취임 후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인준이 취소되거나 해당 회장은 면직 또는 해임된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의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고 설사 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그 효력은 상실된다. 이러한 규정들을 백안시하고 취소나 면직이 볼 보듯 뻔한 인준을 강행하려는 대한체육회나 강 건너 불구경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사법심사 및 국정감사는 사후 불가피하다.

당선자로부터의 재정지원에 대한 기대만을 앞세운 결과는 자명하다. 협회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 공동체 가치 실현에 따른 사회 전반의 신뢰 구축, 권력의 집중과 남용 방지, 조직의 비전 제시와 장기 발전 계획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다. 이는 기대되는 재정지원금액(2019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결산서 회장사후원액 포함 약 37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사회적 자본을 손해로 계상하는 것이다.

이에 IOC는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Good Governance’를 위한 기본 원칙과 요건들을 천명하였고 여전히 이를 강조한다. 조직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핵심으로 하면서 그 중 합법적인 선거(legitimate elections)를 명시하고 있다. 올림픽 종목을 주관하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IOC와 보조하여 ‘모범적 사례를 통한 교육적 가치, 사회적 책임성, 보편적 기본 윤리 원칙에 대한 존중’이라는 올림피즘(Olympism)을 지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당선자의 자진사퇴가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재선 대한체육회장과 그 집행부에게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당선자 인준은 재임기간 내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역시 당선자의 취임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 두 협회 모두 체육계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윗물이 맑지 못해 그렇다는 자조 섞인 푸념과 원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당선자도 괴로울 일이다. 지난 10년 동안 물류회사를 운영해 온 것 이외에 어떠한 자세로 삶을 마주하여 왔는지 대한민국 국민은 알지 못한다. 당선자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이 가장 앞서는데 사실이다.

“우리나라 아이스하키가 많은 성장을 이뤄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고, 진정한 선진국, 강국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지난 세월 이상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지원을 곧 출범하는 새 집행부에 계속해서 그리고 더 많이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 23대 정몽원 前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의 퇴임사 중 일부이다.

과연 최철원 당선자와 그 집행부에게 대한민국 스포츠와 아이스하키의 진정한 발전을 기대해도 좋을까? 당장 대안이 안보인다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은 아닌가? 기대할 수 없다면 재선거를 하거나 차라리 협회장직을 공석으로 비워두는 대한아이스하키인들의 자긍심을 기대해 볼 수는 없을까? 최철원 당선자의 현명한 판단과 대한체육회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02.15

체육시민연대

# 여론 식은 뒤 ‘보복’... “다음 번엔 누가 나설까요?”

[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 그 후]

“이제 메달이 중요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즐기는 시대입니다. 정부는 전문 체육인들과 생활 체육인들이  
스포츠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간섭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 2021년 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 생중계 신년사

그러나...

**정지은 등 피해 진술한 현역 6명중  
4명은 이례적으로 재계약 실패  
계약만료라지만 사실상 쫓겨나  
“16년 바쳐온 운동인생 끝났다”**


**피해증언 함께 했던 동료들  
쫓겨난 자 - 남은 자 갈려  
연대조차 불가능**

**가해자, 합의 압박하며  
“돈 밝히나”  
다른 동료들은  
“왜 시끄럽게 구나”  
합의 - 거부 선수 사이  
인사도 양게 돼**

**정부 철저조사·재발방지  
하겠다고 밝혔지만  
철인3종협회는 관리단체 지정  
경주시청팀은 사실상 해체  
정부와 대한체육회는  
선수들 방치**

**수구대표·여자컬링팀도  
비위 폭로 뒤 극심한 고통**

※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스포츠폭력 추방 대책, 되레 선수들 입 틀어막는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가혹행위 가해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와 관계기관의 무관심 속에 남은 선수들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 최속현 선수가 속했던 경주시청 여자팀은 팀 해체 논란에도 휩싸였다.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은 경주시청 가혹행위 사건으로 기소된 김규봉 전 경주시청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장윤정 전 주장은 징역 4년, 김도환 전 선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앞서 22일 재판에선 트레이너 안주현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법적 판단이 나오면서 “그 사람들 죄를 밝혀달라”던 최속현의 한은 조금이나마 풀렸지만, 현장에서 애꿎은 선수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경북노동인권센터와 경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 등은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주시는 트라이애슬론 여자선수단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실상 해체된 트라이애슬론 여자선수단을 조속히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경주시청팀은 남자 3명과 여자 3명, 총 6명으로 구성된 팀이었다. 이 중 김도환과 장윤정이 폭행 가해자로 제명돼 남자 2명, 여자 2명이 남았다. 현재 남자팀은 선수 1명을 보강해 3명으로 정상 운영하고 있지만, 여자팀은 남은 2명마저 팀을 떠나는 동안 신규 채용이 없었다.

다음 장 계속

경주시청은 “팀 해체가 아니라 운영 중지일 뿐”이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경주시청은 이미 트라이애슬론팀 해체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해 7월 최숙현 선수 죽음으로 여론이 들끓자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팀 해체를 비롯한 강력한 조치 및 예방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조사를 받았던 현역 선수 6명 중 4명이 재계약에 실패한 것도 이례적이다. 전직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ㄱ씨는 “선수층이 얇은 트라이애슬론에서 꾸준한 성적을 내는 선수를 4명이나 재계약하지 않은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기준 대한체육회 등록 트라이애슬론 실업팀 선수는 모두 188명. 등록된 56개 종목 중 트라이애슬론보다 선수층이 얇은 곳은 택견, 에어로빅힙합 등 7곳에 불과하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주먹구구식 대책만 내놓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꼬리 자르기에 몰두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7월 최윤희 전 차관의 피해 선수 면담 뒤 선수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8월에는 가혹행위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한체육회의 안일한 대응 등을 지적했지만, 체육회가 “일부 사실과 다른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맞서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7월29일 이사회를 열어 스포츠폭력 추방 대책으로 “폭력 등의 문제 적발 때 해당 팀에 전국체전 5년 출전정지를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적극 신고 때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매년 전국체전만 바라보는 선수들 입장에서 입을 다물라는 족쇄에 가깝다. ㄱ씨는 “팀 내 다른 선수들은 최대한 보호해야 하는데 이런 식이면 선수, 지도자, 담당자 모두 쉬쉬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전직 경주시청팀 선수 ㄴ씨는 “대한체육회장 등 윗사람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왜 사실상 동료 선수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mailto:givenhappy@hani.co.kr)

# 문체부 “KOC 분리 변함없이 추진... 현장 의견 존중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분리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년 문체부 업무계획을 발표한 오영우 1차관은 질의응답을 통해 "KOC 분리는 스포츠 혁신위원회 권고안 중 주요 사안"이라며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오 차관은 "세계적인 동향과 국제체육단체의 자율성 존중, 4000억 원이 투입되는 정부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통합 체육회 2기가 출범했는데 기본적으로 스포츠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문체부가 중심이 돼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진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서는 민주당 박정 의원과 전용기 의원 등이 KOC 분리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체육계 반대 등으로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KOC의 분리에 반대한 대한체육회의 입장도 변화가 없다. 그동안 KOC 분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한 이기흥 회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18일 당선 인터뷰에서도 이기흥 회장은 "KOC 분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승인을 받아야 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이견이 있는데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의 한 담당자는 "공식적인 제안은 아니지만 최근 체육회 측에 KOC 분리를 포함한 주요 현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토론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KOC 분리문제는 2018년 조재범 코치 성폭행 사건 등 스포츠 미투를 계기로 수면위로 떠올랐다.

체육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대한체육회가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을 앞세워 스포츠 인권 보호 등 스포츠 개혁에 미온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체육계 구조 개혁을 위해 출범한 민관합동기구인 스포츠혁신위원회도 2019년 KOC 분리를 주요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대한체육회에서 KOC를 분리해 국제 스포츠에서 정치적 독립과 전문성을 보장하면서 막대한 체육 예산을 사용하는 체육회는 체육 정책 집행 기관으로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논리이다.

그러다 지난해 고 최숙현 선수 사건까지 불거지자 문체부는 KOC 분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일부 사건으로 체육계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KOC 분리는 해결책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고 오히려 정책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2009년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합쳐져 전문체육계의 최고 단체가 됐다. 이후 2016년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해 명실상부한 한국 체육계의 최고 단체로 거듭났다.

#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관련 주요 업무계획

문화로 되찾는 국민일상  
문화로 커가는 대한민국

2021. 2.

## 용자지원 확대(20년 662억원→21년 1362억원)

코로나 피해 기업 지원 및 국제대회 국내개최 시 비대면 대회 활성화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 민간 체육시설 이용료 환급 지원 확대(20년 120억원→21년 180억원, 60만명)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 확대 위한 홍보 등 소비 진작 유도

비대면 스포츠강습시장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등 지원(69억원), 생활체육지도자 참여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배포 등 비대면 스포츠활동 지원 확대

## 스포츠혁신 및 공정성 제고

□ (선진 스포츠 협치 구축) 대한체육회 · 종목단체 · 지방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체육회 법인화 준비위원회 구성(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법인 설립절차 진행(~'21.6월)을 통한 지방체육회 법인화의 안정적 시행 · 관리

○ 종목단체에 대한 지원(지능형기술 활용 종목 지원 100억원, 인건비 지원 240억원 등) 및 지방체육회 법인화에 따른 지원 확대 등 추진

- 체육단체(종목단체, 지방체육회) 평가와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체육 단체의 자율적 개선 · 혁신 유도

□ (보편적 스포츠권 확립) 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스포츠 참여 및 모든 체육인의 보편적 복지 혜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누구나 차별 없이 스포츠를 향유 ·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스포츠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규정한 「스포츠기본법」 제정 추진

○ 체육인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은퇴 후 진로, 경제활동 참여 지원 등 체육인 인생 이모작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복지 체계 개선

• 체육인재개발원 건립(~'23년), 선수의 성장단계별(학생-실업팀-은퇴후) 진료교육 실시(50억원)

다음 장 계속

-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 체육계 인권보호 체계 확립 및 체육계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강화\*, 스포츠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 징계 정보통합신고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체육계 인권보호 시스템 강화
    - \* 조사권(이행력 확보, 방식 구체화 등), 피해자 보호조치 요구권 등
  - 실업팀 운영규정 제정,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체육계 표준 계약서 확산(실업·프로) 등 추진

## 국민 문화소비 지원 강화

- (생활체육 참여 확대)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을 통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선순환 및 국민의 건강 증진 추진
  - 스포츠클럽법 제정을 통해 스포츠클럽 등록제 도입, 지정스포츠 클럽 지정·승강제 확대(생활·전문체육 선순환) 등 추진
  - 생활체육활성화(스포츠클럽)→체력인증 서비스(체력인증센터)→맞춤형 운동 처방 및 체력관리 (체력인증센터, 찾아가는 체력관리 서비스)의 연계시스템 구축

## 문화인프라 지속 확충

- (국민의 문화접근성 제고) 공공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의 문화생활 활성화
  - 수영장 포함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55개소),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37개소), 학교부지 활용 국민체육센터(8개소) 등 조성

## 스포츠산업 지속 육성

- 혁신 스포츠기업 육성) 스포츠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위해 금융 인프라 경영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 스포츠 용자 대상 범위 확대\*, 신용보증부 용자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한 영세 스포츠기업 용자 혜택 강화
    - \* (기존)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 (확대) 모든 체육용구 생산업체
  - 스포츠산업 자금 출자 규모 확대('20년 100억원→'21년 130억원), 성공보수 요건 변경(3년→2년)을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 스포츠기업의 법률·노무, 사무·전시공간 등 일괄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21.2월 개소)
    -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와 기존 거점\*과의 연계를 통한 유기적 지원
- \* ①지역창업지원센터(창업 특화기관, 7개소), ②지역거점(창업·마케팅·홍보 등 통합지원기관, 3개소), ③스포츠산업지원센터(기술·인력공급 전문기관, 포스텍)
- (프로스포츠 활성화) 산업화, 해외진출 등 시장 규모 확대 지원
  - 프로스포츠 통계\* 작성, 정책연구 등 프로스포츠 산업화 기반 마련
    - \* 연맹 및 구단별 매출액·구성 항목,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채용 및 이직 현황



-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영상 활용 해외 홍보 콘텐츠 제작 ▪ 송출, 영문 자막 및 해설 제공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후원사 미디어 노출 효과 분석, 라이선스 보호, 온라인 상품판매점 운영 등 지원하여 수입원 발굴 및 자생력 강화
  - (스포츠 신시장 창출) 스포츠 거대자료 공개를 통한 창업 지원
  - 국민 체력측정(체력수준, 운동능력 등) 및 공공체육시설(시설 세부현황, 이용현황 등) 관련 거대자료 발굴 ▪ 공개 고도화
- \* 창업 예시 : 공공체육시설 데이터 활용 실시간 예약서비스 개발, 국민체력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기반 건강관리서비스 ▪ 맞춤형 스포츠용품 구독서비스 개발 등

## 국제문화 교류·협력 강화

-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2020도쿄하계 및 2022베이징동계 올림픽 ▪ 패럴림픽의 안전한 참가, 2021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총회(ANOC) 성공 개최 등 추진
- 2020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대책반 재가동('21.1월~) 및 단계 ▪ 상황별 위기대응 지침\*에 따라 선수 ▪ 지도자 교육 및 상황별 모의 연습('21.5~7월)
  - \*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 ▲정치 및 평화(육일기, 독도 등) 관련 쟁점, ▲판정시비(33개 종목별 국제연맹 규정 및 올림픽 참가 규정 등), ▲자연재해 등 일반 사건 ▪ 사고 대비 등
- 2032 남북 공동올림픽 지지 확보 및 주요계기별 남북 체육교류 재개를 추진하고, 포용 ▪ 평화 등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의 확산\*
  - \* 신남방 쌀매종목 우수선수 양성(10억원), 개도국 청소년 초청 '동계스포츠체험(드림프로그램)', 수호랑 반다비 캠프(50억원), 피겨스케이팅 육성(3.5억원), 파라아이스하키 등 장애인 동계스포츠 프로그램(9억원)
- 태권도 올림픽 종목 유지 및 세계화를 위한 태권도원 상징화(16.4억원), 전자호구 연구개발(15억원), 해외 사범파견 확대('20년 54억원→'21년 62억원) 등 추진

# 스포츠계 인권침해 제보 및 지원활동 안내

체육시민연대는



‘철인3종선수 사망사건 공대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스포츠인권팀’ 소속

10여분의 인권변호사분들과 함께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계 인권침해 제보가 들어오면

초기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합니다.

☑ 아래의 이메일로 제보 바랍니다.

공동대책위원회



[forsportsreform@gmail.com](mailto:forsportsreform@gmail.com)

체육시민연대



[sports-cm@daum.net](mailto:sports-cm@daum.net)

# 체육시민연대

##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